

제10장

귀농·귀촌,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마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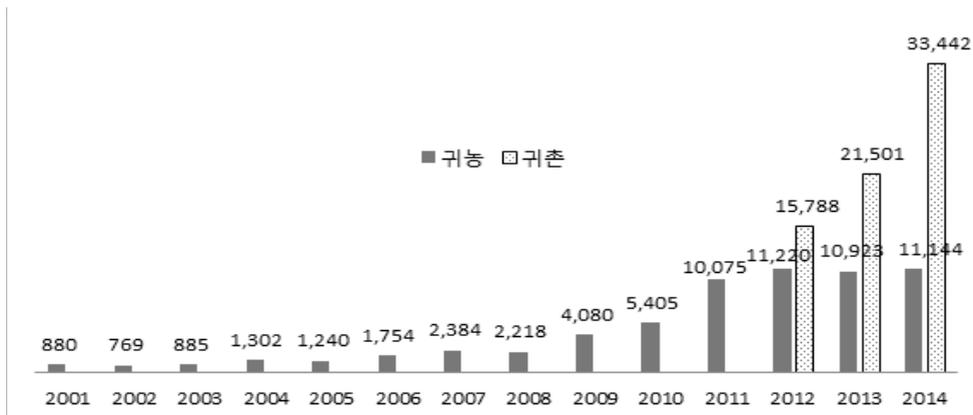
- | | |
|-----------------------|---------------|
| 1. 귀농·귀촌 현황과 전망 | 3. 귀농·귀촌 애로사항 |
| 2. 귀농·귀촌자 농업·농촌 적응 실태 | 4. 맺으며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msj@krei.re.kr

1. 귀농·귀촌 현황과 전망

- 2000년대 말부터 귀농·귀촌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1년 880가구 밖에 되지 않던 귀농·귀촌 가구가 2014년에는 4만 가구를 넘어섰다.
 - 영농을 목적으로 한 귀농의 경우 2011년 이후 1만 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2년부터 별도로 조사되는 귀촌자의 경우 2012년 15,788가구에서 2013년 21,501가구, 2014년에는 33,442가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0-1. 2001년 이후 귀농·귀촌자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1~2011); 통계청(2012~2014).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시에서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측면,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시작, 그리고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본격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귀농·귀촌자들은 농업·농촌의 혁신인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4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율(43.0%)이 전체 귀농·귀촌 인구 증가율(37.5%)보다 높아, 귀농·귀촌이 베이비부머 이외 세대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2 정책 이슈

*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 ('01) 647호 → ('10) 1,841 → ('11) 4,416 → ('12) 10,729 → ('13) 12,318 → ('14) 17,611

- 통계청(2010) 자료에 따르면 농가경영주 중에 60대 이상이 60%가 넘었지만 귀농·귀촌인 중에는 60대 이상이 20%대 수준이었다(마상진 등 2014). 학력은 농업인 중에 중졸이하가 65.1%이고, 전문대졸이상이 10.6%였는데 귀농·귀촌자는 각각 5.1%, 78.4%였다.

표 10-1. 귀농·귀촌인과 기존 농업인의 연령·학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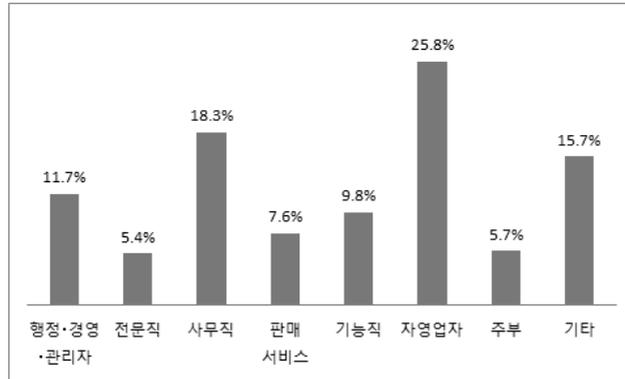
단위: %

		귀농·귀촌인(2014)			농업인(2010)
		귀농	귀촌	합	
연령	30대 이하	10.7	19.6	17.4	2.8
	40대	22.4	22.0	22.1	11.9
	50대	39.6	29.6	32.1	24.4
	60대 이상	21.8	28.8	28.3	61.8
학력	중졸 이하	4.6	5.7	5.1	65.2
	고졸	27.3	27.8	27.5	23.7
	전문대졸	13.5	10.1	11.9	4.0
	대졸	44.9	45.5	45.2	6.6
	대학원졸 이상	9.7	10.9	10.3	
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마상진 등(2014); 통계청(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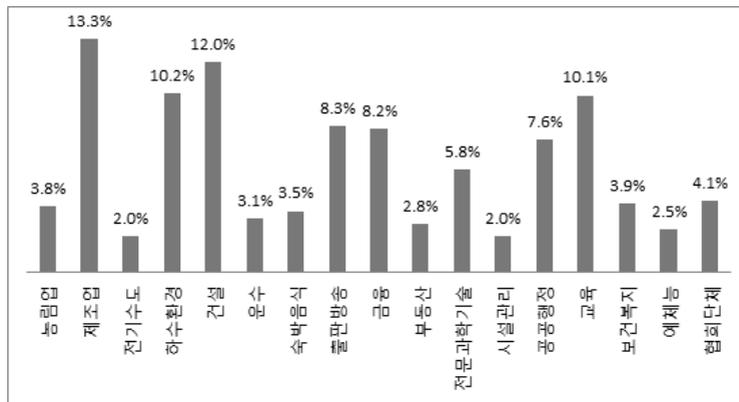
- 귀농·귀촌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직업분류상으로 보면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고, 사무직, 행정·경영·관리자, 기능직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마상진 등 2014). 산업분류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 건설업, 하수·환경, 교육, 출판·방송, 금융,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많았다(마상진 등 2015). 상당수는 관련 전문자격과 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11.7%, 기능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 보유자가 31.1%, 기타(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간호사, 상담사, 바리스타, 요가강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21.5%였음.

그림 10-2. 귀농·귀촌 전 직업 (직업분류)



자료: 마상진 등 (2014)

그림 10-3. 귀농·귀촌 전 직업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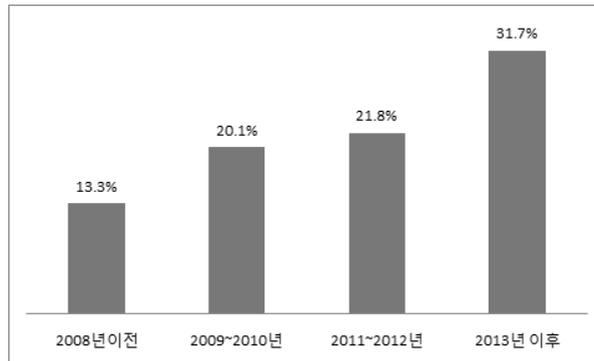
자료: 마상진 등(2015)

- 도시민의 귀농·귀촌은 최근 몇년처럼 높은 성장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귀촌자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도시민의 은퇴이후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 수가 점차 줄고 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다.
 - * 71.3%(2006년) → 47.7%(2010년) → 39.0%(2014년)
 - 우리나라의 경우 귀농·귀촌이 국가 경제위기와 맞물려 발생하였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는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 악화와 미국

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당분간 유지되면서, 도시에서의 노동시장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 최근에 귀농·귀촌자일수록 일자리 문제로 귀농·귀촌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마상진 등 2014), 청년(15~29세) 실업률이 최근 10%을 넘어서고,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2020년대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0-4. 시기별 '새 일자리'를 찾아 귀농·귀촌한 사례 비율



자료: 마상진 등(2014)

그림 10-5. 최근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www.kostat.go.kr)

- 상당수가 이미 귀농·귀촌을 실행하였고 농촌의 농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최근 2~3년의 높은 귀농·귀촌 열기가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귀촌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이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귀농·귀촌자 농업·농촌 적응 실태

-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자의 농업·농촌 적응 실태를 와 유형별·단계별 귀농·귀촌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기술원은 귀농·귀촌 현상을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1천 명의 귀농·귀촌인 패널을 구축하여 이들의 정착실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 2014년, 2015년 두해 조사 결과 중에 귀농·귀촌의 농업·농촌 적응실태 및 적응상의 장애요인 등을 귀농·귀촌 연차, 연령, 귀농·귀촌 목적과 유형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¹⁾.
- 귀농·귀촌자의 농업·농촌 적응실태는 경제활동과 지역사회활동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소득 변화, 가구소득 수준, 주요 경제활동 내용 및 분야, 농업 생산 이외 분야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 지역사회활동으로 농촌의 주요 모임(마을 회의, 영농 모임, 공익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활동, 농업교육, 귀농·귀촌인 모임 등) 참여 수준을 조사하였다.
- 대다수가 귀농·귀촌 이후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
 - 귀농·귀촌 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5%(‘크게 감소’가 43.0%, ‘조금 감소’가 22.0%), ‘큰 변화 없음’이 21.3%, 증가했다는 응답이 13.8%(‘조금 증가’가 11.1%, ‘크게 증가’가 2.7%)였다.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크게 감소’의 응답률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39.7%지만, 2009~

1) 패널은 지역배분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조를 얻어 편성이 되었음. 조사대상자 중 경기·강원권 15%, 충청권 19.1%, 전라·제주권 28.3%, 경상권 37.6%으로 최근 3년 귀농·귀촌자 지역 분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분포는 40세이하가 8.8%, 41~50세가 29.0%, 51~60세가 42.6%, 61세 이상이 19.5%였다.

2010년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38.2%, 2011~2012년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41.0%, 2013년 이후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51.3%로 점차 높아졌다.

표 10-2. 귀농·귀촌 시기별 소득 변화

단위: %

귀농귀촌 시기	소득 변화				
	크게 감소	조금 감소	큰 변화 없음	조금 증가	크게 증가
2008년 이전	39.7	23.0	16.7	13.9	6.7
2009~2010년	38.2	24.7	18.8	15.1	3.2
2011~2012년	41.0	24.4	25.1	8.5	1.1
2013년 이후	51.3	16.9	22.6	8.4	0.8
전 체	43.0	22.0	21.3	11.0	2.7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가구 소득이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5.3%지만, 2009~2010년은 5.9%, 2011~2012년은 9.2%, 2013년 이후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17.9%로 점차 높아졌다. 이는 귀농·귀촌 연수가 쌓여가면서 귀농·귀촌자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3. 귀농·귀촌 시기별 가구 소득

단위: %

귀농귀촌 시기	가구 소득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4,000만원	4,000~5,000만원	5,000~7,000만원	7,000만원 이상
2008년 이전	5.3	8.1	8.6	12.9	18.7	14.4	9.6	13.9	8.6
2009~2010년	5.9	11.3	10.2	10.8	18.8	15.1	10.8	8.6	8.6
2011~2012년	9.2	10.3	9.9	15.2	21.3	10.6	8.2	8.9	6.4
2013년 이후	17.9	9.3	11.7	9.7	15.2	12.8	7.4	8.2	7.8
전 체	10.1	9.7	10.2	12.3	18.5	13.0	8.8	9.7	7.7

- 영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던 귀촌자들도 귀촌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 귀농·귀촌 후 종사하는 주요 경제활동을 조사한 결과 ‘농업에만 전념’이 40.2%, ‘농업과 다른 경제활동을 겸업’이 35.8%, ‘농업 이외 타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가 13.3%, ‘은퇴 또는 무직(텃밭 정도의 취미 농업 포함)’이 10.6%였다. 그런데 대체로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농업종사비율이 높아졌다.

‘농업에만 전념’한다는 집단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44.5%지만, 2009~2010년은 41.3%, 2011~2012년은 37.8%, 2013년 이후는 38.5%로 낮아졌다.

표 10-4. 귀농·귀촌 시기별 주요 경제활동

단위: %

귀농귀촌 시기	주요 경제활동			
	농업에만 전념	농업과 다른 경제활동 겸업	농업외 타분야에만 종사	은퇴 또는 무직 (퇴발정도)
2008년 이전	44.5	35.4	15.3	4.8
2009~2010년	41.3	35.3	10.9	12.5
2011~2012년	37.8	39.6	12.6	10.1
2013년 이후	38.5	32.7	14.0	14.8
전 체	40.2	35.9	13.3	10.7

- 연간 농산물 판매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 ‘거의 없음’은 응답이 18.6%, 500만 원 미만이 27.9%, 500~2000만 원 미만이 26.2%, 2000~5000만 원이 17.2%, 5000만 원 이상이 10.1%였다.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농산물 판매액 규모가 커졌다. 농산물 판매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17.2%지만, 2009~2010년은 11.3%, 2011~2012년은 8.0%, 2013년 이후는 5.7%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에 ‘거의없음’은 각각 8.0%, 15.2%, 15.1%, 33.5%였다.
- 주로 종사하는 경제활동 분야, 농산물 판매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귀농·귀촌 연수가 쌓여가면서 귀농·귀촌자 중에 점차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농업소득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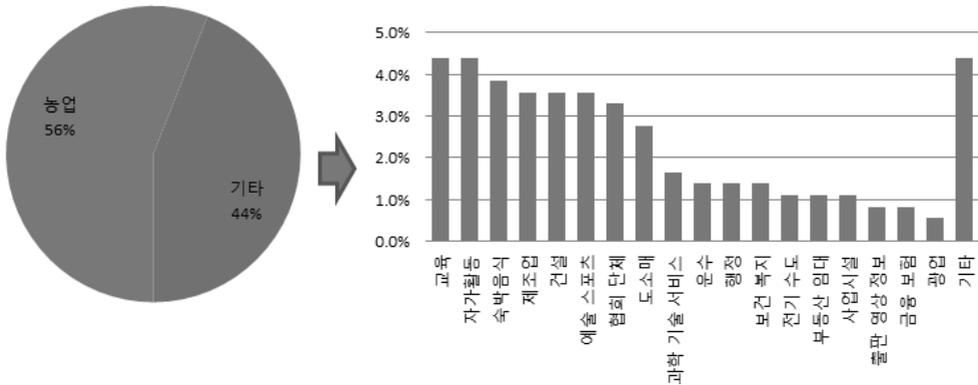
표 10-5. 귀농·귀촌 시기별 농산물 판매액 규모

단위: %

귀농귀촌 시기	농산물 판매액 규모								
	거의 없음	120만원 미만	120~300만원	300~500만원	500~1천만원	1~2천만원	2~3천만원	3~5천만원	5천만원 이상
2008년 이전	8.0	6.9	6.9	12.1	16.7	9.8	10.9	11.5	17.2
2009~2010년	15.2	6.6	6.6	5.3	15.2	17.9	9.9	11.9	11.3
2011~2012년	15.1	11.3	9.2	10.9	13.4	17.6	7.6	6.7	8.0
2013년 이후	33.5	11.8	10.8	9.4	8.0	8.0	5.7	7.1	5.7
전 체	18.6	9.5	8.6	9.7	13.0	13.3	8.3	8.9	10.1

- 귀촌자들의 현재의 주 경제활동 분야를 조사한 결과 농업이 56%로 가장 많았다. 기타 산업 영역으로는 교육, 자가활동, 숙박·음식점, 제조업, 건설, 예술·스포츠, 협회, 단체, 도소매 등이 있었다.

그림 10-6. 귀촌자들의 현재 주요 종사분야



- 귀농·귀촌자들은 농업 생산이외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경제활동 분야를 넓혀가고 있었다.
 - 농업 생산이외 분야별 소득(경제)활동 정도를 조사한 결과 ‘농산물 판매’ 활동을 60.7%(특정시기 종사 41.0%, 일상적으로 19.7%)가 하고 있었고, 이밖에 ‘농산물 가공’ 40.8%, ‘농촌관광사업’ 10.8%, ‘자영업’ 13.7%, ‘농외 직장’ 21.5%, ‘농외 시간제 노동’ 33.2%, ‘농업 노동’에 35.1%가 종사하고 있었다.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수록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 활동 비율이 점차 늘었다.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가 2008년 이전 귀농·귀촌 집단의 경우 각각 56.7%, 70.4%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 집단은 44.7%, 64.6%, 2011~2012년 귀농·귀촌 집단은 38.7%, 60.1%, 2013년 이후 귀농·귀촌 집단은 27.8%, 51.6%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 ‘시간제 근무’는 각각 29.3%, 30.6%, 35.5%, 36.1%로 높아졌다.

표 10-6. 귀농·귀촌 시기별 농업 생산이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평균)

단위: %

귀농귀촌 시기	농업 생산이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농촌관광	자영업	농외 직장	시간제	농업 노동
2008년 이전	56.7	70.4	20.6	15.1	27.3	29.3	35.1
2009~2010년	44.7	64.6	7.2	16.9	21.0	30.6	32.9
2011~2012년	38.7	60.1	9.0	10.5	21.4	35.5	30.8
2013년 이후	27.8	51.6	7.4	13.5	17.6	36.1	41.5
전 체	40.8	60.7	10.8	13.7	21.5	33.2	35.0

-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활발해졌다.
-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있음'이 66.8%였다. 농민단체, 공익봉사활동 등에 대한 참여는 다소 적은 반면, 마을회의나 행사,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친목 단체 참여는 활발한 편이었다.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대체로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났고, 농업관련한 마을 경제활동, 농민단체 참여가 늘어났다.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과 '농민단체'에 대한 참여 비율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 집단은 각각 59.2%, 43.1%였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 집단은 57.2%, 37.3%, 2011~2012년 귀농·귀촌 집단은 48.8%, 31.7%, 2013년 이후 귀농·귀촌 집단은 41.8%, 24.5%로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점차 낮아졌다. 반면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은 각각 61.3%, 69.3%, 71.2%, 73.2%로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모임 참여가 활발하였다.

표 10-7. 귀농·귀촌 시기별 지역사회 활동 참여 비율(복수응답)

단위: %

귀농귀촌 시기	지역사회활동 참여								
	마을 회의 행사	마을 영농 활동	공익 봉사 활동	여가 문화 활동	농민 단체	친목 단체	종교 활동	농업인 교육	귀농 귀촌 모임
2008년 이전	85.6	59.2	49.2	60.0	43.1	65.1	39.9	72.9	61.3
2009~2010년	77.6	57.2	47.9	55.7	37.3	59.6	45.0	72.9	69.3
2011~2012년	81.8	48.8	42.9	51.2	31.7	63.3	39.0	77.6	71.2
2013년 이후	69.0	41.8	30.5	42.7	24.5	53.3	38.2	71.1	73.2
전 체	78.0	50.6	41.6	51.6	33.3	60.2	40.1	73.8	69.2

- 귀농·귀촌자 상당수는 농촌에서 마을의 주요 모임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었다.

- 귀농·귀촌자 중에 26%가 마을의 주요 모임(부녀회, 청년회, 지도자회, 노인회)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귀농·귀촌 연차가 3년 이하인 사람의 경우 14.3%가 4~10년인 경우는 29.1%, 10년 이상자의 경우 37.4%가 주요 마을 모임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표 10-8. 마을 모임(부녀회, 청년회, 지도자회, 노인회)에 간부(이장 포함)활동 현황

	귀농·귀촌 연차			전체
	3년 이하	4~10년	10년 이상	
모임의 간부로 활동하는 경우(%)	14.3	29.1	37.4	26.0

3. 귀농·귀촌 애로사항



- 귀농·귀촌자의 애로사항을 정착과정, 그리고 이후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으로 나누어, 귀농·귀촌자의 주요 개인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 귀농·귀촌자가 농촌 정착과정상에 겪는 어려움으로 자금 문제, 영농기술문제, 농지구입의 문제, 생활여건의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이 많았다.
 - 정착과정상에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였다. 젊은 세대일수록 귀농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다.
 - 일자리 부족은 젊은 귀농·귀촌자일수록, 귀농자보다는 귀촌자가, 농촌보다 도시 출신자가 많이 지적하였다.
 -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향 귀농·귀촌(U턴)자보다는 타향 귀농·귀촌(J턴)자나 도시출신 귀농·귀촌(I턴)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겪고 있었다.
 -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젊은 귀농·귀촌일수록, 고향보다는 타향 출신, 도시출신 귀농·귀촌자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다.
 - 생활여건 불편 문제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귀농보다는 귀촌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지적하였다.
 - 도시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외로움 문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촌출신자보다 도시출신자들이 더 겪고 있었다.
 - 가족내 갈등은 고향 출신 귀농·귀촌자들이 더 겪고 있었다.
 - 주요 집단별(연령, 목적에 따른)로 나누어 보면 30~40대 귀농자는 여유자금 부족, 농지 구입, 주거문제를, 30~40대 귀촌자는 특히 일자리 부족 문제를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60대 이상 귀촌자는 30~40세대와 달리 생활여건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 건강체력문제, 외로움 등의 어려움을 많이 지적하였다.

표 10-9.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정착과정상의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귀농·귀촌 정착과정상의 어려움											
		일자리	여유 자금 부족	농지 구입	자녀 교육	지역 주민 갈등	주거 문제	생활 불편	영농 기술	건강 체력	외로움	가족내 갈등	
연령	30대 이하	10.0	55.0	40.0	6.3	7.5	23.8	22.5	20.0	1.3	6.3	3.8	
	40대	14.6	55.2	29.2	10.7	9.3	14.6	19.6	21.7	6.0	7.8	7.5	
	50대	9.6	44.1	23.9	4.7	20.2	8.9	26.8	28.9	8.0	11.0	7.0	
	60대 이상	9.9	35.1	17.3	0.0	20.3	7.9	30.2	34.7	14.4	17.3	7.9	
목적	귀농	7.9	50.8	28.4	6.3	14.5	14.8	20.8	28.4	7.4	7.7	7.4	
	귀촌	15.2	39.1	23.9	3.4	19.0	7.2	28.7	26.4	8.9	12.9	7.5	
유형	농촌 출신	고향	10.5	51.3	23.7	7.9	9.5	8.2	24.3	32.6	9.5	7.2	11.2
		타지	10.9	49.3	28.5	4.6	19.0	12.0	26.8	22.9	5.3	11.3	5.3
	도시출신	12.0	40.9	24.3	4.3	19.0	13.5	24.3	26.3	8.8	14.3	5.3	
주요 집단	3040대 귀농	7.9	60.0	38.6	7.9	7.1	17.9	17.1	19.3	7.1	2.9	8.6	
	3040대 귀촌	27.4	53.6	31.0	8.3	7.1	11.9	16.7	19.0	4.8	9.5	3.6	
	60대 귀촌	8.7	29.9	18.1	0.0	24.4	4.7	33.1	29.9	14.2	19.7	7.9	
	전체	11.2	46.6	25.3	5.6	15.9	11.4	25.1	27.5	8.1	11.0	7.0	

- 경제활동 관련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토지 확보 어려움 포함)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일 기회·정보 부족, 능력(지식/기술) 부족 등이 그 다음이었다.
 - 능력·자신감부족, 신체적 한계 등의 내적인 문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젊은 귀농·귀촌자일수록 자금 부족을 많이 제기하였다.
 - 주요 집단별로 보면 30~40대 귀농자는 자금 부족, 기회정보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30~40대 귀촌자는 자금부족, 능력부족, 인맥부족 문제를, 60대 이상 귀촌자는 기회정보 부족, 능력부족, 신체적 한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 능력부족이나 관련 기회, 정보 부족, 인적 네트워크 부족, 자신감 부족 등 대다수 경제활동상의 애로사항은 귀농·귀촌 연차가 쌓여가면서 완화되고 있었다.

표 10-10.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관련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

		경제활동상의 애로사항					
		능력 부족	기회 정보 부족	인맥 부족	자금 부족	자신감 부족	신체 한계
연차	3년 이하	32.1	44.4	16.7	47.1	7.2	13.3
	4~10년	26.8	30.1	18.9	53.3	4.8	15.7
	10년 이상	29.4	26.5	15.7	45.1	3.9	21.6
연령	30대 이하	22.0	30.5	20.7	57.3	2.4	6.1
	40대	24.6	33.3	17.0	57.6	4.0	9.4
	50대	30.2	35.6	18.5	52.0	6.3	13.4
	60대 이상	33.7	33.7	15.8	34.7	7.1	33.2
주요 집단	3040대 귀농	20.1	35.3	15.1	59.0	2.2	7.9
	3040대 귀촌	31.3	27.7	20.5	43.4	3.6	10.8
	60대 귀촌	31.2	40.8	16.0	37.6	5.6	31.2
	전체	28.7	34.0	17.9	50.6	5.4	15.6

- 지역사회활동 관련 애로사항으로 관련 기회·정보 부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이밖에 ‘시간이 없음’, ‘인맥(네트워크) 부족’, ‘마을사람들의 텃세’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 연령대가 높을수록 능력이나 자신감 부족 문제, 신체적 한계, 정보 접근성 문제, 지역주민의 텃세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텃세는 타 지역출신, 도시출신자에게 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주요 집단별로는 30~40대 귀농자는 상대적으로 시간 부족 문제를, 30~40대 귀촌자는 기회정보 부족, 인맥 부족, 시간 부족 문제를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60대 귀촌자는 기회정보 부족, 인맥 부족, 지역주민들의 텃세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능력이나 자신감 부족, 기회나 정보 부족,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 애로사항 대부분은 귀농·귀촌 연차가 쌓일수록 더 낮은 빈도로 지적되었다. 다만 지역주민의 텃세는 귀농·귀촌연차가 쌓여갈수록 애로사항으로 더 많이 지적되고 있었다.

표 10-11.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활동 애로사항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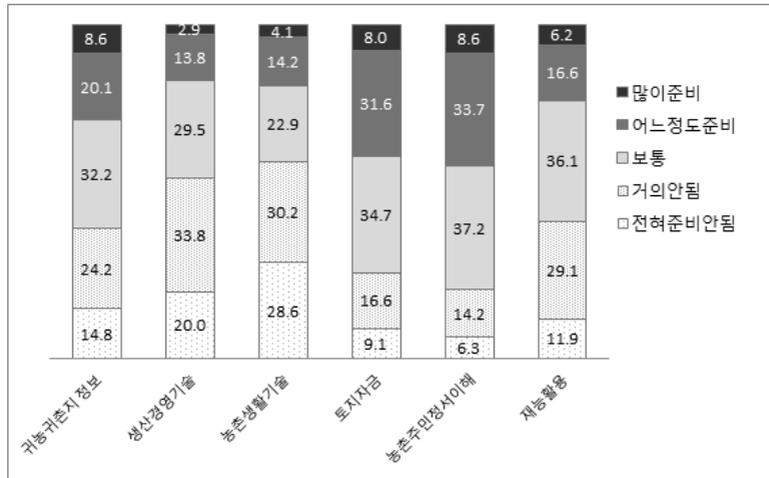
단위: %

		지역사회활동 애로사항								
		능력 자신감 부족	기회 정보 부족	인맥 부족	신체 한계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지역 탓세	기타	
연차	3년 이하	12.6	76.6	44.4	5.6	33.9	7.7	11.5	3.1	
	4~10년	11.8	66.2	35.7	7.2	45.2	7.6	14.8	4.6	
	10년 이상	8.8	50.9	28.9	6.1	54.4	16.7	17.5	1.8	
연령	30대 이하	8.6	60.5	40.7	2.5	51.9	9.9	7.4	4.9	
	40대	11.5	65.4	31.6	4.1	54.3	10.4	11.9	3.0	
	50대	10.3	70.1	37.6	5.3	40.4	8.4	16.5	4.8	
	60대 이상	16.5	67.0	42.8	14.4	29.4	6.7	16.0	2.6	
유형	농촌 출신	고향	14.8	69.4	36.4	9.3	49.1	6.9	6.9	3.8
		타지	9.9	67.2	42.0	5.1	37.6	10.9	16.8	2.2
	도시출신	10.6	67.2	36.2	5.2	41.9	8.0	17.6	4.7	
주요 집단	3040대 귀농	11.8	61.8	30.9	3.7	58.1	8.8	8.1	3.7	
	3040대 귀촌	7.3	67.1	35.4	4.9	52.4	11.0	9.8	6.1	
	60대 귀촌	13.6	72.0	39.2	9.6	31.2	8.8	15.2	4.8	
전체		11.7	67.5	37.5	6.6	43.0	8.7	14.2	3.8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없이 귀농·귀촌을 하거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있다.
- 귀농·귀촌전 귀농·귀촌지 정보 및 지원제도, 생산·경영 기술, 농촌 생활기술, 토지 및 자금 준비, 주민 정서 이해 및 갈등 해결, 농촌에서 자신의 이전 직업 전문성 활용 등 분야별 준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주민 정서 이해 및 갈등 해결 관련 준비, 정착에 필요한 토지와 자금 준비 등에 대한 준비에 비해, 농업 생산·경영 기술, 농촌 생활기술, 농촌에서 자신의 재능(이전 직업 전문성) 활용, 귀농·귀촌지 정보 및 지원제도등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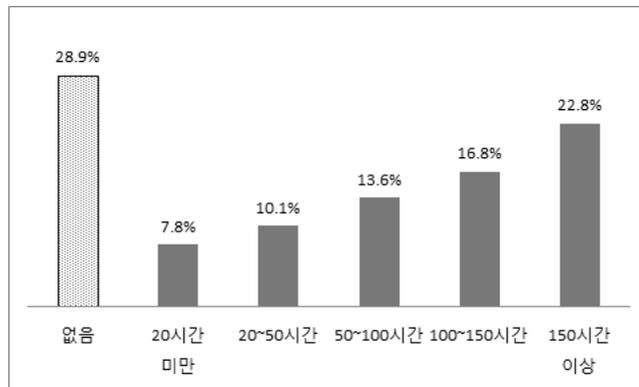
그림 10-7. 귀농·귀촌 전 분야별 준비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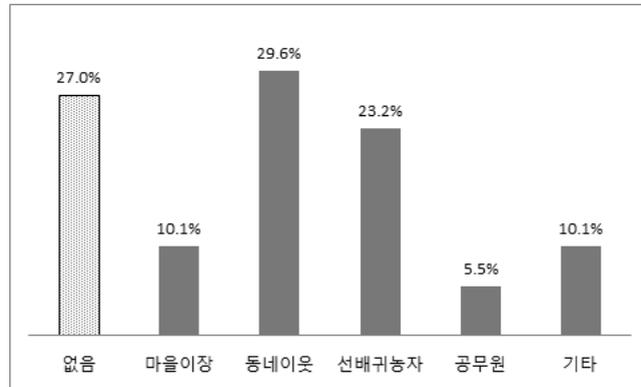
- 귀농·귀촌 준비 관련 교육시간 조사 결과, 평균 118.9시간으로 적지 않았지만, 교육이 전혀 없는 경우도 28.9% 였다. 20시간 미만이 7.8%, 20~50시간은 10.1%, 50~100시간은 13.6%, 100~150시간은 16.8%, 150시간 이상은 22.8% 였다.

그림 10-8. 귀농·귀촌 전 준비교육시간



- 귀농·귀촌 과정에서 동네 이웃(29.6%), 선배 귀농자(23.2%), 마을 이장(10.1%), 지역 공무원(5.5%), 그밖에 종교단체, 친인척 등에 도움을 대부분 받지만, 주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27.0% 였다.

그림 10-9. 귀농·귀촌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



* 복수응답결과

- 귀농·귀촌 연차와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왕래 및 지역사회참여는 귀농·귀촌자의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에 가장 중요한 관련 변인이었다.
 - 귀농·귀촌자의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 조사결과 이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2.1%(‘전혀 없다’가 41.2%, ‘거의 없다’가 30.9%)였고, ‘아직 모르겠다’가 19.3%, 이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6%(‘조금 있다’가 7.8%, ‘매우 많다’가 0.8%)였다.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도시 이주 의향이 ‘전혀 없다’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주 의향이 낮았지만 30~40대 귀농·귀촌자 보다 60대 귀촌자의 이주 의향이 높았다. 농촌 출신자보다는 도시 출신자가 도시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농자보다는 귀촌자에서 도시 이주 의향이 더 높았다.

표 10-12. 귀농·귀촌자들의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도시 재이주 의향

단위: %

		도시 재이주 의향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아직 모르겠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연차	3년 이하	30.5	33.4	28.0	5.8	2.3	
	4~10년	41.8	30.6	18.3	8.5	0.8	
	10년 이상	62.7	26.1	4.5	6.0	0.7	
연령	30대 이하	37.5	31.3	22.5	5.0	3.8	
	40대	44.2	29.9	17.2	8.0	0.7	
	50대	38.9	35.2	18.1	6.3	1.5	
	60대 이상	42.9	23.6	23.1	9.3	1.1	
목적	귀농	48.0	30.4	15.1	6.4	0.3	
	귀촌	34.4	33.9	21.1	9.2	1.4	
유형	농촌 출신	고향	43.0	28.9	19.9	6.5	1.8
		타지	44.6	30.5	19.0	4.8	1.1
	도시출신	37.9	32.9	18.6	9.3	1.3	
주요 집단	3040대 귀농	47.1	32.3	14.2	6.5	0.0	
	3040대 귀촌	36.6	34.4	22.6	4.3	2.2	
	60대 귀촌	39.3	31.1	17.0	11.9	0.7	
전체		41.8	32.4	17.2	7.8	0.8	

- 어떤 개인특성이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과 관련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5단계 도시 재이주 의향 응답결과를 재이주의향 없음(=0:전혀없음, 거의 없음), 있음(=1: 아직모르겠다, 조금있다, 매우많다)으로 재코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귀농·귀촌 연도, 연령, 귀농·귀촌 유형, 배우자 동거 여부, 가구소득, 현재 경제활동, 주민간 왕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이 투입되었다.
- 유의도 수준 0.05 수준에서 관련 변인의 의미를 해석하면, 귀농귀촌을 최근에 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민왕래가 적고,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적을수록 도시 재이주 의향이 높았다.
- 도시 재이주 의향에 대해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는 귀농·귀촌 연도와 주민과 왕래 빈도, 지역사회 참여 정도 였다. 이는 지역의 원활한 편입이 농촌 적응에 있어 핵심 요인이고, 많은 부분 시행착오를 거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13. 도시 재이주 의향 관련 변인에 대한 일반화 선형 모형

변인		B	Std. Error	Wald Chi-Square	Sig.
상수		266.718	50.521	27.871	0.000
귀농·귀촌 연도		0.132	0.025	27.707	0.000
연령		0.015	0.009	2.841	0.092
귀농·귀촌 준비기간		-0.072	0.048	2.212	0.137
귀농·귀촌 유형	농촌출신(=1)	-0.256	0.185	1.894	0.169
	고향귀농(=1)	0.326	0.202	2.577	0.108
배우자동거 여부 (비동거=0, 동거=1)		0.242	0.181	1.794	0.180
가구소득		-0.056	0.028	3.880	0.049
주민 왕래		-0.269	0.070	14.896	0.000
지역사회 참여		-0.036	0.0124	8.218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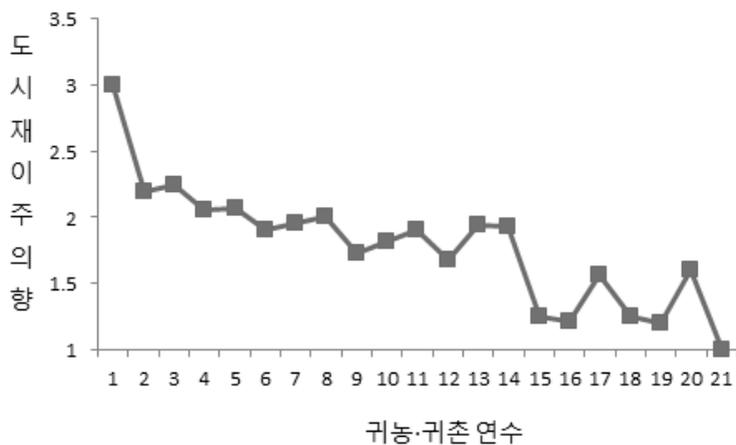
주 1) Likelihood Ratio Chisquare =86,662 (df=12) sig=0.000

2)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① 준비기간 없음 ② 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⑤ 2~3년 미만 ⑥ 3년 이상. '주민 왕래'는 ① 거의 왕래안함 ② 연 3~4차례 ③ 월 1회이상 ④ 주 1회이상 ⑤ 매일 등으로 5단계로 조사. '지역사회 참여'는 마을 주요모임(마을행사, 마을 영농조직, 지역 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단체, 농업인교육, 귀농귀촌인모임) 등에 참여빈도(①전혀 참여안함, ② 거의 참여안함, ③ 가끔참여, ④적극참여)의 합

4. 맺으며

- 귀농·귀촌 연수가 쌓여가면서 귀농·귀촌자들의 상황은 대체로 나아지고 있는 바, 귀농·귀촌 정착 초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 대부분의 귀농·귀촌자들은 귀농·귀촌 직후 소득이 도시에서 보다 감소를 경험한다. 하지만 농업 종사와 더불어 농산물 판매,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또한 자영업, 농업외 직장, 농외 시간제 노동, 농업 노동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이 점차 증가한다.
 - 귀농·귀촌 연수가 쌓일수록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모임 참여 비율이 높아졌고, 정착과정의 애로사항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림 10-10. 귀농·귀촌 연수에 따른 도시재이주 의향 변화



주) 도시재이주의향 (1=전혀없음~3=아직모르겠음~5=매우많음)

- 귀농·귀촌자들이 정착과정,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측면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연령대별, 귀농·귀촌 목적과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 귀농·귀촌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 주요 집단별로 보면 30~40대 귀농자는 여유자금부족, 농지구입, 주거문제를, 30~40대 귀촌자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60대 이상 귀촌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 건강체력문제, 외로움 등을 어려움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 60대 귀촌자 대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하고, 30~40대 귀농·귀촌자들에게는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와 더불어 적절한 자금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 특히 자금력이 떨어지지만 후계영농인력으로서 잠재력이 큰 청년세대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농업교육과 더불어 보다 획기적인 정착 초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현재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지원, 현장실습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지만 사업규모가 작고 한시적이다).

선진국의 청년농업인 지원제도

- 유럽의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는 18~39세 청년 신규 취농자(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 프랑스의 경우 고졸이상의 학력에 농업관련 교육을 2년 이상 이수자에 대해 ha 70유로, 최대 34ha까지 지원. 영농기반이 없는 경우 은퇴농 농지연계
- 일본의 청년취농금부금제
 - 일본은 농업인구의 심각한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부터 '청년 신규 취농 배증 프로젝트' 진행. 기존 1만명 규모의 신규 취농 인력에 더해 추가로 1만명(법인취업 4,000명, 창업 6,000명) 확보하려는 계획.
 - 취농 준비자에게는 현 농업대학교나 선진농가·선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150만엔 2년 (1200시간 관련 교육 이수) 지원
 - 법인에 취직한 청년에 대한 연수경비로 연간 최대 120만엔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독립·자영자는 인정신규취농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엔을 최대 5년간 지원

우리나라의 청년농업인 지원제도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 유도
 - 채용지원금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원분야 및 연차에 따라 1인 월 180만원 이내 차등지급 (경영체당 1명 신규채용 인력 지원, 다만 농업계 졸업생을 채용시 1명 추가 채용 가능)
 - 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영체 기준 최대 36개월 지원(추가채용을 통해 2명을 채용한 경영체는 2명의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 지원)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실습시 월 80만원을 5개월간 지급(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지급)(연 560명 규모)
 - 실시주체: 시·군 농업기술센터(국비 50%, 지방비 50%)
 -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2016년 시작)
 - 39세 이하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 영농창업자에게 최대 2년 훈련수당(1년) 또는 창업안정자금(1년) 지원 (연 300명 규모)
 - ① (창업 준비단계) 독립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최대 1년, 월 80만원) 지급
 - ② (창업 초기단계) 창업(예정) 소재지 시·군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 일정요건 확인 후 창업안정자금(최대 2년(준비단계 포함), 월 80만원) 지급
-
-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주민과 융화, 지역사회 각종 모임 참여를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 귀농·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의향 관련 변인 분석 결과에서 보듯 지역 주민과의 교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마상진 등(2008), 김철규(2011), 김정섭 등(2012)의 신규 취농 또는 귀농·귀촌 선행연구

에서 공동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귀농·귀촌자들의 정착에 있어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편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농촌 주민 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는 외부인 입장에서 보면 지역 텃세일 수 있지만, 역으로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것이다.

- 지금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은 주로 주거, 토지, 운영 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귀농·귀촌자들의 요구도 이와 관련이 깊다. 경제적 지원은 표면적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정착에 있어 애로사항 전반의 문제를 해소시키지는 못한다. 애로사항 해소의 실마리는 경제적 자본 요인 보다는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에서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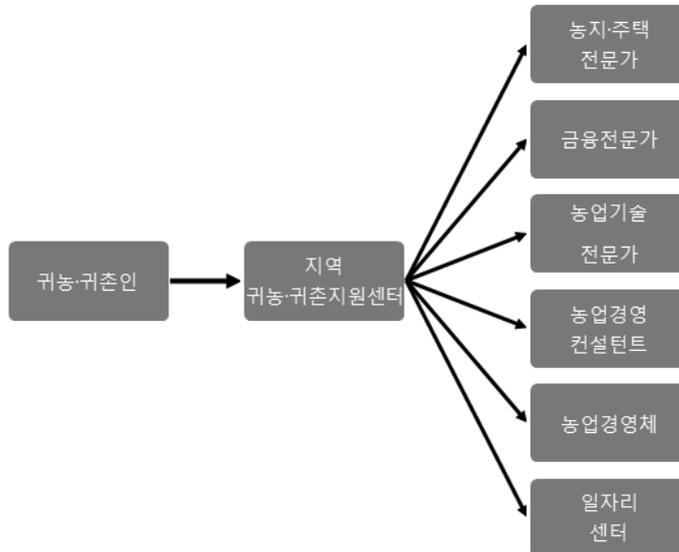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에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꽤 많은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존 농민들과 엄청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마을 간사 제도나 사무장 제도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발생합니다...(지자체 귀농·귀촌지원 담당자 인터뷰)

-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자본, 일자리나 전문성 개발 기회 등은 농촌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와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관련 조직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한 예로 귀농자의 경우 각종 농지나 정책자금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마을의 이장, 농협 직원, 군청 직원 등)와의 관계 없이는 정책자금이나 농지와 같은 자본 관련 장애요인을 해소하기가 힘들고, 농촌의 각종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가입하지 않고는 유통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접근하기 어렵다. 즉 농촌 지역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각종 관련 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각종 경제적 자본 위주의 지원은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경제적 자본 지원과 더불어 귀농·귀촌자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조직 가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착 초기 지원,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은 결국 지역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기에 그 역할 수행에 있

어 지역별 지원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 지역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귀촌자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완충장치로서 작동되게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귀농·귀촌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귀농·귀촌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주어야 한다.
- 특정 주체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행정의 도움 하에 분야별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모든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10-11.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관련 규정 (시행 2015.7.21.)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